

비정규직 복직 거부 지엠 자본에 ‘옛’ 날려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어 ... 한국지엠, 컨테이너 쌓고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장이 보름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2020년 부평2공장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46명 우선 복직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카허 카셈 한국지엠 사장은 ‘철탑 농성장 강제 철거’ 가처분 신청으로 답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0월 15일 한국지엠이 제기한 철탑 농성장 철거 가처분 신청 건에 관해 이영수 조합원 등 해고노동자 13명에게 일주일 이내에 철탑을 철거하고, 농성을 풀지 않으면 하루 당 7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 1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수도권권, 충청권 지부·지회와 경남지부, 전북지부 조합원 등이 참가해 함께 투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가 아니라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

지엠 자본은 노동자와 인천 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이는지 모르는지, 교섭과 대화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투쟁사에서 “인천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한국지엠은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경영 위기가 아닌 날이 없었다. 그때마다 구조조정 명목으로 해고를 자행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인화 본부장은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만큼 한국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고상한 말은 더 하지 않겠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원한다면 해고자부터 우선 복직시키라”

라고 경고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1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도 군산공장은 결국 문들 닫았다. 금속노조는 더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황인호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 사기극에 한국지엠은 신이 나서 춤추고 사법부는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탄압을 더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황호인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먼저 해고된 비정규직을 먼저 복직시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 소박해서 아예 들리지 않는가 보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해고도 안 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겠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부평공장 정문을 출발해 서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국지엠은 공장 서문을 잠그고 컨테이너를 쌓아 쇠시슬로 묶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달걀과 옛을 던지며 항의했다.

“노동자 생명 하찮게 여기는 사회 거부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당신 일터 안전한가요 문화제’ 열어 ... 23일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 전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10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문화제’를 열



었다. 참석자들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10월 7일 출범했다. 금속노조가 연이어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위 출범과 제도개선 투쟁 전개를 노동인권단체 등에 제안했다. 대책위에 공공운수노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재단(준) 등이 참여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현행 법은 산재가 일어나도 현장 실무담당자를 형사상 가볍게 처벌하는 정도”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사망 노동자 가족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4월 경기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고 김태규 노동자의 누나 도현 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원하청 임직원 11명 모두 고발했다. 현재 원청은 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원청까지 처벌하고 동생 죽음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의 주요 피해자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빼 수 없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위험한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다 쳐도 산재신청을 못하게 한다”

라며 “특 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해 이주노동자는 산재 신청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대책위의 활동계획을 알렸다. 금속노조와 대책위는 10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산업재해와 실태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29일 현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선 촉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간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여를 서로 독려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모든 일터의 안전을 기원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선언문을 함께 읽으며 문화제를 끝맺었다.

“나는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합니다.

나는 죽음을 외주화하는 일터를 거부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악을 거부합니다.”